與野, 민생행보 박차… '정년연장' '고교 무상교육' 강조

한동훈, 격차해소특위 정책토론회 "일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 충분"

이재명, 고교무상교육 현장간담회 "학생복지 등 줄여야 하는 상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당분간 사법리스크로 인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27일 각각 '정년연장'과 '고교 무상교육'을 화두로 민생 일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지난 한국노총 방문 시에도 한국노총으로부터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4대 요구를 제안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최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정년연장)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에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부금법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충당하는 법으로 올해 말이면 일몰된다.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국고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교부금법 관련 입장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법 관련 예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일몰 연장안이)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법사위, '與 후보 추천 제외' 상설특검 개정안 통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 시 대안
내달 11일엔 검사 탄핵 청문회 예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검사(강백신, 엄희준) 탄핵소추 청문회 관련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7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 후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됐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다음날 10일 본회의 때 재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단기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법사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한편, 11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AI기본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됐고,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태홍 기자

尹, '李 무죄판결·與 당원게시판' 논란에도 묵묵부답

김건희 특검 거부권 때도 입장 없어
민생 집중하자 긍정적 여론 늘어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이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등 정치 현안에서 한 발 물러나 민생과 외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 당시 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최근 여당의 '뜨거운 감자'인 당원게시판 논란에도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특히 당원게시판 논란의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 발단임에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의 무대응 방침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이나 당원게시판 역시 정치적 갈등 요소가 강한 이슈이기에 말려들수록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세가 나타난 것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8%포인트 급반등했고,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주 만에 20%대 중반을 회복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주 외국 정상과 회담 일정이 연이어 잡혀 있다. 지난 25일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또 오는 28일엔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라트비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통상·관세정책 영향을 점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관련 국가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서예진 기자 syj@